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 발표
- 단신
 - [디지털] EU AI법, 8.2일부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링 의무화
 - [배터리] EU, 15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부스터 지원 제도' 대상 프로젝트 모집
 - [디지털] EU, 3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최대 7개 AI 기가팩토리 구축 입찰 개시
 - [FSR] EU 집행위원회, Temu의 역외보조금 관련 현장조사 협조의무 위반 잠정 판단
 - [경제] 중동발 에너지 충격 속 유로존 성장세 개선과 ECB 금리 인상 가능성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8.31(월)~9.1(화)	EU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 개최
9.9(수)	공공조달법, 유럽혁신법 발표
9.14(월)~17(목)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9.23(수)	알루미늄 스크랩 공급망 의존도 완화 조치 발표
9.30(수)	유럽제품법(European Product Act) 발표(유럽제품규정 개정, 표준화규정 개정 등)

EU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 발표

- ◎ EU 집행위원회는 2차 자주 묻는 질문(FAQ)에 신규 26개, 업데이트 7개 문항 수록
- ◎ 기존 재고, 고유 식별, 기술문서, 수입자 의무 등 '26.8.12일 적용 관련 실무 기준 명확화
- ◎ 초기 집행은 즉시 판매금지보다 시정 기회 부여에 중점...기업은 공급망별 책임 주체와 증빙체계 점검 필요

□ 개요

- EU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 발표(8.3일)
 - PPWR 일반 적용일('26.8.12일)을 앞두고 기존 재고, 포장 추적성, 제조자·수입자 책임 등 주요 실무기준을 구체화
 - 2차 FAQ는 신규 26개 및 업데이트 7개 문항을 수록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진출기업의 준수절차 및 공급계약 점검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

- (개요) EU 역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으로,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
- (적용 범위)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적용
- (주요 일정) '25.2.11일 발효, '26.8.12일 일반 적용.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 등 일부 의무는 '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 (주요 의무) △우려물질(SoC) 및 중금속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표시 및 정보 제공,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 선언,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재사용·리필 및 보증금 반환제도 등

□ 주요 내용 * 신규·업데이트 문항 중 주요 내용 발췌

- '26.8.12일 이전 생산·출시된 기존 재고의 처리 기준 명확화
 - **(출시 완료 재고)** '26.8.12일 전에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포장은 이후 PPWR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장에 유통 가능
 - **(생산 완료·미출시 재고)** '26.8.12일 전에 생산됐으나 해당 날짜까지 미출시된 재고는 폐기·재제조·재라벨링할 필요가 없으며,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는 수반 문서로 제공 가능
 - **(적용일 이후 생산품)** '26.8.12일 이후 생산되는 포장은 원칙적으로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를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크기·형태·기능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반 문서 활용 가능
- 포장 고유 식별 및 추적성 의무의 적용 단위 구체화(PPWR 제15조 제5항)
 - **(식별 단위)** 모든 개별 포장에 각각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포장 타입·모델·생산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식별수단 사용 가능

- **(표시 범위)** 컵·뚜껑·라벨 등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포장 단위는 모든 구성요소에 각각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요소에 필요한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허용
- **(범용 포장재)** 접착테이프, 일반 비닐봉투, 건조제 봉투와 같은 표준화된 포장재도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 배치 수준으로 추적 가능
- **(문서 연계)** 식별정보를 통해 해당 포장의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은 포장 규격·배치번호와 관련 증빙자료를 연결하는 내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 판매포장·그룹포장·운송포장의 구분 기준 명확화
 - **(판매포장)** 제품과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으로, 제품 보호·브랜딩·소비자 정보 제공 기능 수행
 - **(그룹포장)** 여러 판매 단위를 묶어 재고관리, 진열 또는 복수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포장으로, 제거하더라도 개별 제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포장
 - **(운송포장)**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를 운송·취급하면서 손상을 방지하는 외부 포장으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상자·팔레트·포장재 등이 포함
- 포장 공급업체와 제조자의 기술자료 제공·관리 책임 명확화
 - **(공급업체)**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제조자가 PPWR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제조자)**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의 PPWR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을 부담
- 비EU 제조자의 포장을 취급하는 수입자 의무 구체화(PPWR 제18조)
 - 수입자는 '26.8.12일부터 비EU 제조자의 적합성평가, EU 적합성 선언, 식별·표시 및 관련 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 정보를 포장 또는 수반 문서에 표시해야 함
 - 일반·무상표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EU 공급자와 기술자료 제공, 사양 변경 통지 및 당국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
- '26.8.12일 이후 초기 시장감시·집행 방향 제시
 - 미준수 확인 시 즉각적인 판매금지·회수보다 우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판매금지·회수·시장철수 등 후속 조치 가능
 - 시정 기회는 적용 유예나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적용일까지 표시·기술문서·책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對EU 수출기업은 브랜드·PB·OEM 포장의 설계·사양 결정권을 토대로 공급망별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계약과 내부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6.8.12일 전후 생산·출시 재고를 구분하고, 포장 식별정보와 적합성평가·기술문서를 연계한 증빙 및 수입자 대상 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자료 : EU 집행위원회(8.3)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kjs@kotra.or.kr)

□ [디지털] EU AI법, 8.2일부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링 의무화

- EU AI법의 투명성 의무와 규제 집행 권한 발효, 본격 시행 개시
 - 8.2일부 EU 시장에 출시되는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제공업체와 이를 활용하는 배포 업체는 AI법의 제50조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AI 제품 및 관련 솔루션은 4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12.2일부터 의무 적용 예정
 - 투명성 의무에 따라 기업은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이미지·오디오·비디오·공익적 텍스트 등의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라벨 및 기계 판독 표시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이용자가 AI 챗봇·감정·생체 인식 분류 도구에 노출될 때에도 이를 고지해야 함
 - 위반 시, EU·회원국 당국은 대기업에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기관이 위반할 경우 최대 75만 유로, 중소기업은 비례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책정
 - 한편, 고위험 AI 관련 의무는 규제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로 연기 확정, 민감·공공 영역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27.12.2일, 물리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은 '28.8.2일부터 의무 적용 예정

<EU AI법 시행 일정>

일자	내용	일자	내용
'24.8.1	AI법 발효	'26.12.2	기존 출시 제품의 전환 기간 완료,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아동 성 학대 자료 배포 시스템 금지
'25.2.2	일반 조항 적용	'27.8.2	회원국 별 AI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시
'25.8.2	일반 목적 AI 규칙·AI법 거버넌스 체계 마련	'27.12.2	민감·공공 영역의 고위험 AI(부속서Ⅲ) 의무 적용 * 생체인식·공공서비스·교육·노동·사법·행정 등
'26.8.2	투명성 의무·혁신 지원·시행 권한 적용	'28.8.2	물리적 제품 내장 고위험 AI(부속서 1) 의무 적용 * 기계, 의료·체외진단 기기, 장난감, 엘리베이터, 자동차, 민간항공, 선박, 개인 및 산업 안전 장비 등

자료 : EU 집행위원회 AI법 시행 일정([링크](#)) 참고

- 규제 준수를 위해 AI 기업 및 주요 기관은 AI 투명성 강령*에 자발적 서명 중
 - 투명성 의무 발효에 앞서 집행위원회는 7.20일 투명성 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준수 지원을 위해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행동 강령을 발표
 - 해당 강령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애플, 구글, Open AI, 메타 등 관련 기업*은 의무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기 서명
- * 8.4일 기준 234개 기업이 서명했으며, 서명 기업 상시 추가 중
- 집행위원회는 9월 중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업계 모범 사례 공유, 투명성 조치 이행에 대한 피드백,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서명 기업을 초청할 예정
- 현지 기업은 AI 표시 의무가 어떻게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더욱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기업의 준수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의무 적용일인 12.2일까지 규제 적용을 둘러싼 과도기적 혼선과 대응이 지속될 전망

• 자료 : EU 집행위원회(8.2, 7.20), [AI 투명성 강령](#)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unoin@kotra.or.kr)

□ [배터리] EU, 15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부스터 지원 제도' 대상 프로젝트 모집

- EU 집행위원회, 전기차용 배터리 셀 생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총 15억 유로 규모 '배터리 부스터 지원 제도(Battery Booster Facility)*' 공모 및 기업 신청 접수 개시

<배터리 부스터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개요) '25.12월 발표된 EU 배터리 부스터 전략의 일환으로 '26.6월 도입되었으며, EU ETS 수익으로 조성된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활용한 최초의 무이자 직접대출 제도
- . (신청기간) '26.7.28일~9.30일 23시 59분(CEST)
- . (지원 내용) 프로젝트당 최대 5억 유로 한도에서 적격 생산 확대 비용의 최대 60%를 무이자 대출 지원
- (신청 대상)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재한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 프로젝트
- . (지원 요건) ①공모 개시 시점에 생산 확대 단계에 진입, ②연간 생산능력 10GWh 이상, ③신청기업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완전 상업 규모의 생산시설일 것
- (평가 기준) 기술적·재무적 성숙도, 경제적 타당성, 안정적인 상업생산 가능성 및 유럽 경제와 배터리 생태계에 대한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이번 제도는 공장 신설이나 설비 확충 자체보다, 이미 생산 확대 단계에 진입한 배터리 셀 공장이 안정적인 상업생산 단계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
- 초기 양산 단계의 낮은 수율과 높은 원가·운영비 부담을 완화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량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
- 유럽 배터리산업의 핵심 병목인 생산 확대 단계에 재원을 집중하고, 유럽 내 신규 진입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수단으로 평가
- 엄격한 지원요건과 최종 지배주주 심사*를 통해, 기존 상업생산 경험을 보유한 배터리 제조사의 신규·증설 사업보다는, 첫 상업적 대량생산(full commercial-scale)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에 정책자원을 집중
- * 최종 지배주주의 전 세계에서 이미 가동 중인 상업생산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생산시설에 대한 지배구조·결정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심사
- 지원 범위를 생산 확대 비용으로 한정하고, 사업계획상 이행목표의 진척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출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기업의 책임 있는 자금운용 유도

• 자료 : EU 집행위원회([7.28, 공모 안내](#))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디지털] EU, 3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최대 7개 AI 기가팩토리 구축 입찰 개시

- EU는 7.30일, 역내 AI 연산 역량을 확대하고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내 최대 7개 AI 기가팩토리*를 구축·운영할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발표
- * 첨단 AI 모델을 학습·운영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AI 프로세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기술, 고속 연결망 및 에너지 효율적 데이터센터 등을 결합한 대규모 연산 시설
- (사업 목표) 유럽 기업(스타트업·스케일업·중소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유럽 자체 인프라에서 첨단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 대상) 기업·공공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또는 특수목적법인(SPV)이 신청 가능하며, 시설은 단일 회원국 내 단일·복수 부지 또는 여러 회원국에 걸친 분산형 연산 시설로 구축 가능*

* 입찰 세부조건상 시설 소재 회원국 관할 당국의 공식 재정지원 확약 필요

- 산업계가 사업을 주도하며, EU·회원국의 공공 지원 최대 100억 유로와 민간투자 최소 200억 유로를 통해 총 300억 유로 이상의 AI 기가팩토리 지원이 목표
- (지원 방식)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단(EuroHPC JU)과 동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회원국은 공동 조달 협정에 따라 선정된 시설이 제공하는 AI 연산능력의 일정 사용분을 공동 구매하며, 참여 회원국은 EU 지원액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 부담
- (사업 구성) 사업은 연산 규모에 따라 2가지 시설 유형(Lot), 구축 과정에 따라 2개 개발단계(1단계·2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시설 유형) 제1유형(중형·최대 4개)은 최첨단 AI 가속기*를 1단계 최소 2만 5,000개에서 2단계 최소 7만 5,000개로 확대해야 하며, 제2유형(대형·최대 3개)은 AI 가속기를 1단계 최소 4만 개에서 2단계 최소 10만 개로 확대해야 함
- * AI 가속기 수치는 서로 다른 AI 가속기의 성능을 엔비디아 H100칩 성능 기준으로 환산한 표준화 수치로, 실제 H100칩 설치 수를 의미하지 않음
- (단계별 지원) 1단계는 초기 시설 구축 단계로 제1유형에 프로젝트당 EU 자금 최대 1억 유로, 제2유형에 최대 2억 유로를 지원하며, 2단계*는 연산 능력 확장 단계로 각각 최대 4억 유로와 8억 유로를 추가 지원
- * 1단계 EU 지원은 현행 EU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21~'27년) 재원으로 확정됐으며, 2단계 EU 지원은 차기 EU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28~'34년)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함
- (하드웨어 조달) 컨소시엄은 유럽 또는 유사입장국*의 공급업체로부터 하드웨어를 조달 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EU-미국 무역합의 후속 조치로 미국 반도체 기업 AMD·엔비디아·퀄컴과 3건의 의향서(LOI)를 체결해 컨소시엄의 원활한 하드웨어 조달 지원
- *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의 구체적인 범위는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
- 입찰은 '26.11.12일 16시(CET)에 마감되며, EuroHPC JU의 평가를 거쳐 '27년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관련 계약을 체결, 같은 해 건설에 착수해 계약 체결일부터 18개월 이내 운영 개시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7.30](#)), Politico Pro([7.30](#)) 등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황준혁(jh10535@kotra.or.kr)

□ [FSR] EU 집행위원회, Temu의 역외보조금 관련 현장조사 협조의무 위반 잠정 판단

- EU 집행위원회는 7.31일 테무(Temu)의 모회사 PDD Holdings와 EU 내 운영 자회사 WhaleCo Technology에 역외보조금 규정(FSR)상 현장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잠정 판단을 담은 사유서(Statement of Grounds)를 송부
- 집행위원회는 역내시장 왜곡 우려가 있는 역외보조금의 수령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25.12.2~5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Temu 사업장에서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

- 이번 절차는 해당 현장조사 과정에서 Temu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 집행위원회는 Temu가 조직·경영구조, EU 내 사업에 사용되는 IT 도구·시스템 및 특정 장부·기록 제출 요청 등에 충분히 응하지 않아 관련 정보 검토가 제한됐다고 잠정 판단
- 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역외보조금 규정 제14조에 따른 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유서 송부는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Temu 측은 집행위원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번 절차는 '25.12월 현장조사 당시 Temu의 대응만을 대상으로 하며,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여부에 관한 예비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

• 자료 : EU 집행위원회(7.31)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 [경제] 중동발 에너지 충격 속 유로존 성장세 개선과 ECB 금리 인상 가능성

-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도 수출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 유지
- '26년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2%를 웃도는 0%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에는 시장 전망치 0.2%를 상회하는 0.4% 성장 기록*
 -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각 0.2%, 스페인 0.7%, 아일랜드 3.9% 기록 (자료원: Eurostat)
- 유로화 약세로 유로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개선된 점이 성장을 뒷받침했으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과 경기 하방 위험 존재
- 에너지·서비스·근원물가의 동반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확대되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
- '26.7월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0% 상승한 영향 등으로 2.9%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ECB의 물가 목표치 2% 상회
- ECB는 6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7월 2.25%로 동결했으나, 고유가가 물가·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로 9월을 포함해 연내 1~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확대

• 자료 : FT(7.30, 7.31)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720229	반덤핑	관세유지	러시아, 중국	'26.7.28
화학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290621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화학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291631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기타	폴리아미드 원사 (Polyamide yarns)	540245, 540261, 540251, 540231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화학	바이오디젤 (Biodiesel)	2710, 2710 3824, 3826, 1516, 1518	상계관세	재심개시	미국	'26.7.31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순환경제	철강 제품 대상 에코디자인규정(ESPR) 위임법 제정위한 증거 수집	5.20~8.12	링크
보건	담배 규칙 개정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 수렴	5.18~8.14	링크
ESG	공급망 실사(CSDDD)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증거 수집	6.12~8.14	링크
디지털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초안 의견 수렴	7.2~9.7	링크
디지털	반도체법 2.0(Chips Act 2) 초안 의견 수렴	7.2~9.10	링크
디지털	신규 클라우드·AI 개발법 초안 의견 수렴	7.2~9.29	링크
화학	RoHS 전자제품 내 납·카드뮴 사용제한 예외 조정 관련 개정 초안 의견 수렴	7.8~8.5	링크
기후	CBAM 인증서의 판매·환매 관련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7.9~8.6	링크
R&I	Horizon Europe 유럽 파트너십 공동사업단 이행체계 개편 위한 의견 수렴	7.10~10.16	링크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정에 따른 EU 관심 프로젝트·프로그램 목록 업데이트를 위한 의견 수렴	7.16~8.13	링크
환경	EU ETS2 세부 시행규정 관련 의견 수렴 ①인접국 컨테이너 환적항 리스트 업데이트 ②재정적 보상 세부 규칙	7.17~8.14	링크① , 링크②
산업	EU 이중용도 수출입 규정 관련 의견 수렴	7.23~10.15	링크
화학	EU 유해 화학물질 수출입 규정 부속서 I 및 V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7.24~8.21	링크



브뤼셀무역관 발간자료

(과거 보고서: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GMR26-045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7	EU 철강 관세율할당(TRQ) 국가별 배분 이행규정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6	CBAM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5	EU의 식품 접촉 제품에 대한 규제 추진 동향	2026. 7월
경통리포트26-14	EU K-뷰티 시장 동향 및 규제 대응 가이드	2026. 7월



브뤼셀무역관 영상자료

썸네일(※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 EU 순환경제 규제(PPWR·ESPR) 대응 웨비나 - PPWR 파트 - '26년 하반기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 '26.12월 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
	◦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 EU의 역내 경쟁력 강화 기조 및 핵심 통상규제의 주요 동향,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